

“지리산·백운산 학술림 돌려달라”

〈서울대〉

서울대 법인화팬 무상 양도돼 사유화 우려 구례·광양 의회 등 주민에 한수 강력 요청

서울대 법인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구례에서 지리산 서울대 학술림을 주민들에게 돌려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리산 찾아오기 구례군민행동’(상임대표 이강두·이하 구례군민행동)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대가 법인화될 경우 현재 서울대가 관리하고 있는 지리산 지역의 학술림이 서울대 측에 무상 양도돼 사실상 사유화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현재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유(국가)로 관리하든지 아니면 구례군민에게 돌려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례군민행동은 “지리산은 일제강점기에 잘못된 토지 수급정책

으로 인해 지금까지 서울대가 연구 목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구례군의회 역시 지난 6월부터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지리산권 학술림 현황 파악에 이어 광양시 의회와 의장단 결의문 채택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구례군·광양시의회는 “지리산과 백운산이 서울대에 무상 양도(이전 등기·사유화)되는 것은 부당한 선례를 남기는 특혜이며, 구례군에는 현재와 미래의 성장동력과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 분명하기에 절대 반대한다”며 “서울대와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지리산과 백운산을 구

례군민과 광양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구례군의회는 지리산 국·공유지가 서울대에 무상양도될 경우 사도(케이블카) 설치가 제한되는 것을 비롯해 ▲고로쇠 채취곤란·채취수수료 인상우려 ▲지리산 개발사업과 돌레길, 등산로 등 개척 곤란 ▲반달기슭 곰·식물 복원사업 차질 등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서울대 법인설립·운영 법률’을 통과시킴에 따라 법인설립 당시 관리중인 국유재산은 법인으로 무상양도하도록 돼 있다.

지리산과 백운산에 자리한 서울대 학술림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 일본 동경대 연습림을 조성하면서 비롯됐다. 해방이후 동경대 연습림 관리권은 서울대로 넘어가 남부 학술림으로 변모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전남 동부권



여수 국제 청소년 페스티벌 폐막

지난 31일 열린 ‘제11회 여수 국제청소년축제’ 폐막식에서 청소년들이 환성을 지르고 있다. ‘미래로 움직이는 섬들’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해외 34개국 365명 등 15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여수시 제공〉

광양~日 카페리 주 3회 증편 운항

지난 3월 일본의 대지진과 원전 사태로 인해 여객 예약이 대거 취소되는 등 진통을 겪었던 광양훼리(주)가 원전사태의 안정세와 여객·화물의 꾸준한 증가세에 힘입어 지난 24일부터 주 3 회차로 늘려 운항하고 있다.

카페리 운항 일정은 종전과 같이 일·화·목요일에 광양을 출항해 월·수·금요일 시모노세키에 입항한다.

특히 수요일의 경우 시모노세키 터미널의 혼잡으로 인해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당분간 시모노세키(화물 양하역)와 모지(여객 승하선)를 동시에 기항하게 된다.

광양훼리(주)는 일본 지진사태 이후 경영악화로 곤란을 겪었으나 급여 30% 반납 등 경비절감과 마케팅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광양훼리(주)는 그동안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당초 7월 말까지 기한으로 한 전남도민 승선요금 50% 할인행사를 9월 말까지 두달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성수기에 맞춰 주 3회차가 복원돼 저렴한 가격으로 일본 여행을 생각하는 관광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박람회 홍보 여수오픈 테니스

전국대학·실업 선수 200명 참가 열전

‘2011 여수 오픈 테니스대회’가 지난 29일부터 7일까지 여수시립 테니스장에서 열흘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여수시와 한국실업테니스연맹, 한국대학테니스연맹이 주최하고 (사)대한테니스협회와 여수시 테니스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대학과 실업팀 남녀선수 200여명이 출전했다.

이번 대회는 총 4000여만원의 상금과 남녀 단식·복식경기로 나눠 진행되며, 준결승과 결승전은

Tennis iTV 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류종구 여수시 테니스연합회장은 “조선말 최초로 테니스장이 건립된 여수는 한국테니스의 발원지이자 고향”이라며 “여수박람회를 앞두고 개최한 이번 대회에 박람회를 전국에 알리고, 참가 선수와 임원 및 가족 모두가 대회를 즐기고 잘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전 북



김제 성산공원 녹색 숲으로 조성

年内 절개지 복원 등 재정비

김제시 중심부에 위치한 성산 근린공원이 전통 녹색 숲으로 조성된다.

김제시는 성산 근린공원을 현재 추진중인 동헌 역사문화지구조성과 연계해 전통 녹색 숲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7일 이견식 시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착공 현장 보고회를 가졌다.

시는 사업비 3억7600만원을 투입해 오는 12월 까지 공원내 무단경작

등으로 방치된 사유지를 원상회복하고 ▲500년 수령의 노거수(老巨樹) 절개지 복원 ▲황토 돌레길(길이 290m) 조성 ▲화목류 식재 등을 추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견식 김제시장은 “성산공원의 상징성과 시민의 편익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생태건전성 회복에 나서고 있다”며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남원시 6억7000만원 투입 보건소 전면 개보수

남원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전면적인 보건소 시설개선에 나선다.

남원시는 총 6억7000만원(국비 5억원·지방비 2억원)을 투입해 진료실과 예방 접종실을 비롯한 민원부서와 건강증진센터를 대상으로 전면개·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시설개선사업은 1층(민원부서·한방건강증진센터·다목적실), 2층(건강증진과·건강증진센터)에 분산된 사업공간을 민원인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고려해 적절히 배치 운영하게 된다.

특히 2층에 있던 주민건강 증진센터를 1층 한방건강증진 센터로 옮기



고, 한방 진료실과 어린이 놀이방 등을 재배치한다.

남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시설개선공사 기간동안 인근 여성문화센터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진료와 예방접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뉴스 브리핑

道, 주요 산자락 산사태 예방 사방댐 8곳 설치

전북도는 국지적인 집중 호우로 인명·재산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방댐(산사태나 흩수를 막기 위한 둑) 8개를 설치한다. 도는 올해 224억 원을 들여 주요 산자락에 사방댐을 설치하고 49곳의 사방댐과 하천을 개·보수해 재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초 도내에 최고 462

mm(누적 강수량)의 비가 내렸으나 사방댐 27개소에서 피해를 막은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산사태 발생 때 산간 계곡에서 밀려오는 암석과 토사, 나무 등을 차단해 하류의 주택이나 농경지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조선왕실 시조 사당 창건 240주년 특별전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은 1일부터 10월3일까지 어진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조경묘 창건 240주년 특별전 ‘조선왕실의 뿌리, 조경묘와 조경단’을 연다.

조경묘는 전주 이씨의 시조 이한과 시조비 경주 김씨의 위패를 봉안한 조선왕실의 시조 사당으

로 영조 47년(1771년) 경기전 뒤에 건립됐으며, 조경단은 전주 이씨의 시조 이한의 묘소로 건치안에 있다. 이번 전시는 ▲조선왕실의 시조와 가계·조선건국과 이성계 ▲조경단 건립과 구조·조경단 제례와 수호로 구성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 인구 증가세… 7월말 현재 27만4475명

군산시 총인구가 매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7월말 27만4475명을 기록했다.

7월말 주민등록상 인구는 남자 13만9524명, 여자 13만4951명으로 총 27만447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대비 1874명이 증가한 셈이다.

군산시 인구는 지난 2003년 26만명대로 떨어졌으나 대기업 유치와 고용증가에 힘입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 내부 개발이 본격화되면 인구 증가폭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김제경찰 ‘1일 한 마을 방문제’ 주민들 호응

김제경찰서(서장 조응식)가 소통과 화합을 이끄는 새로운 페러타임의 경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1일 한마을 방문제’를 추진, 호응을 받고 있다.

김제경찰서는 주민들의 안전한 치안을 위해 올해 관할 728개

자연마을을 총 6700회 방문하는 등 친서민 치안대책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빈집털이 교통사고 예방과 청소년 탈선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고유가 시대, 천연가스 차량으로 바뀐다

도내 버스운송업체들 연료비 절감 교체 활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경유 버스를 압축 천연가스(CNG) 버스로 교체하려는 전북지역 운송업체가 크게 늘고 있다.

전북도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압축 천연가스 버스 보급사업’에 따라 지난해까지 전주시 군산, 익산 등 3개 시(市)에 총 646대의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00년부터 이 사업을 벌여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678대를 바꿀 계획이지만 군산지역 보급률

은 이미 100%에 달하는 등 평균 95%가 보급됐다.

이 사업은 사용 연한이 지난 경유 버스를 매연이 없고 연료비 부담이 적은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는 것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한 대에 2000여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은 최근 경유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시간이 갈수록 연료비 절감 효과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00km를 운행할 경우의 연료비는 천연가스 버스가 경유 버스의 55%

수준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시내버스의 연간 운행 거리가 7만~10만km인 점을 고려하면 1년에 2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을 아낄 수 있어 감가상각비를 빼도 ‘남는 장사’인 셈이다.

여기에 경유값 오름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업체들의 ‘교체’ 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업체들이 사용 연한이 만료되지도 않은 버스를 교체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경유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이런 움직임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주·완주 통합’ 이번엔 될까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 여론이 정치권과 시민단체들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조지훈 전주시의장이 통합 여론을 밝히는 가하면 전주·완주 통합 민간 추진협의회가 파제 해소 마련을 요구하면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조 의장은 지난 27일 282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정치인의 유희리 대상이 아닌 전주·완주 통합은 이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장은 “전주와 완주의 주민들은 모두 잘살고자하는 꿈을 같이 갖고 있다”면서 “전주와 완주 통합에 대한 기초를 만든일을 잘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의장은 “통합을 이익으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치인의 유희리 대상을 아닌 통합을 위해서 시의회는 양보하고 손

정치권·시민단체서 상생협력 여론 확산

해보고 희생을 해야한다’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에 앞서 전주·완주통합 민간추진협의회는 “(시군통합은) 지역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장, 군수, 통합추진민간단체의 원만한 사전협의가 전제돼야한다”며 입장을 나타냈다. 또 이들은 “시와 군의 진정성과 신뢰회복, 상생협력, 번영을 위한 해결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5년만에 1만2000ha

전북도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5년 만에 배 이상 늘었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친환경 농산물인증면적은 1만2000여ha로 2006년 5900여ha에 비해 배를 웃돌았다.

친환경 인증 면적은 해마다 20%가량씩 증가하는 추세여서 2015년에는 2만여ha로 대폭 증가해 도내 경제면적의 9%에 이를 전망이다.

도내 친환경 인증 면적은 단계별로 저 농약·무농약·유기농 순이었으

며 작물별로는 벼·과일류·채소류·특용작물 등의 순이었다. 무농약이나 저 농약, 유기농을 하는 친환경농업에는 논은 ha당 21만~39만 원, 밭은 52만~79만 원이 지원된다.

도는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무농약이나 저농약 등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